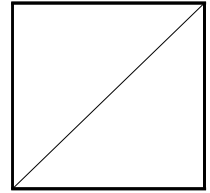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1. 26. (제 2 차)	

스탠다드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1. 26.

1. 의결주문

스탠다드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탠다드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의 사실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0조, 제422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스탠다드자산운용(주) : 등록취소

나.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스탠다드자산운용(주) : 영업 전부정지 3월

다. 업무상 횡령

- 前 경영고문 이두헌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 前 대표이사 백학성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7차 제재심의위원회(2021.11.18.) 심의필
- 청문(2022.1.4.) 실시
- 제2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1.20.) 심의필

<별지>

스탠다드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스탠다드자산운용(주) : 등록취소

- 조치사유

-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제8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1호,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前 경영고문 이두헌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 조치사유

- 업무상 횡령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7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2항

및 제3항 제9호,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前 대표이사 백학성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 조치사유

· 업무상 횡령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7호, 제422조(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제1항·제3항,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2항
및 제3항 제9호,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2. 조치사유

가.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주)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2020.6.2.부터
2021.7.15.(검사종료일)까지 1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주)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2020.3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10월말부터 2021.6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다. 업무상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의 前 경영고문 OOO은 2019.12.9. 前 대표이사 XXX으로부터 회사의 은행거래용 OTP, 법인인감, 금고 열쇠 등을 인계받아 예금 등 고유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자로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1) 2019.12.9. 임의로 회사의 실질사주 △△△의 수행비서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19.12.9. 14억원 및 2019.12.10. 1억원 등 회사 고유자금 15억원이 무단 인출되어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로 입금되게 하였고,

(2) 2019.12.31. 재차 △△△이 실소유한 (주)●●●●●●●의 이사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20.1.2. 회사 고유 자금 15억원이 무단 인출되게 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형법 】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경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본시장법 】

제249조의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⑧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 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2019. 1. 15.>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②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④ 법 제4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별표 1의 3-12-1 및 3-13-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같은 표의 4-121-1 및 4-121-2의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또는 별표 3의 3-14-1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별로 영업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별표3]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 억원)

등록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자본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1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지공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8.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유지요건 위반

1. 제재대상

②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가 법령에서 부여한 최저자기자본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2. 제재기준

②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 유지하여야 할 최저자기자본의 잠식률정도(위반비율)와 위반기간(위반월수) 기준 중
중한기준으로 제재
 - 자기자본 확충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자기자본 확충 완료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
 - 위반기간이 6개월 이하로서 위반비율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가능

위반비율	위반기간	제 재 양 정	
		임직원	기 관
50% 초과	12개월 초과	직무정지(정직) 이상	영업정지 이상
30% 초과	6개월 초과	문책경고(감봉)	기관경고
0% 초과	6개월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기관주의

주1) 위반비율 = (법정 최저자기자본 - 매분기말 자기자본)/법정 최저자기자본×100

2) 위반기간은 분기말 기준으로 합산(1분기 위반시 3개월 위반으로 계산)하여 계산하며 위반비율은 매분기말 위반비율을 산술평균함

Ⅲ-10. 전업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영업 미영위

1. 제재대상

-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령 제373조제4항제1호)

2. 제재기준

- 수탁고 발생여부 및 시정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구 분		제 재 양 정
영업미영위(수탁고 無)		인가·등록 취소
시정 기간* (수탁고 有)	6개월 초과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6개월 이하	기관경고 ~ 기관주의

* 위반사유(6개월 이내 영업 미개시 또는 6개월간 영업 미영위)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신규 수탁고 또는 계약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 영업 미영위는 회사 영업정책 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한다. 다만, 대표이사외에 다른 임원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630